

2019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성평등 관련 제도 현황 연구보고서

- I. 연구 목표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분석
 - 1. 종합지수 분석
 - 2. 개별지수 분석
 - 가.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 나. 여성학 수업과 교수
 - 다. 건강/안전 등 기본권
- IV. 연구 결과

유니브페미
2019. 12.

1. 연구 목표

대학평가는 2014년 교육부에서 수립 및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 순으로 실시되었다. 초기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라는 명칭으로 정원감축, 기능전환, 폐교 및 퇴출경로 마련 등 평가를 통한 조치 근거 마련이 주된 목표였으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그 목적과 명칭이 수정되었다. 현재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진단 항목 및 지표가 공개되어 있다.

○ 일반대

단계	진단 항목	진단 지표	배점
1단계	발전 계획 및 성과 (2)	특성화 계획 또는 증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2
		전일교원 확보율	10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21)	교사 확보율	3
		교육비 활용율	5
		법인 책무성	2
		구성원 참여·소통	1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0)	교육과정·강의 개선	10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10
	학생 지원 (16)	학생 학습역량 강화 지원	5
		진로·심리 상담 지원	3
		장학금 지원	5
	교육 성과 (16)	취·창업 지원	3
		학생 충원율	10
		졸업생 취업률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2	
2단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11)	교양 교육과정(핵심역량 계고)	5
		전공 교육과정(전공능력 배양)	6
	지역 사회 협력·기여 (5)	지역 사회 협력·기여	5
	대학 운영의 건전성 (9)	구성원 참여·소통	5
		재정·회계의 안정성	4

그림 1 일반대 대학기본역량 진단 항목 및 지표
(출처: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 홈페이지)

매년 자체적으로 대학평가를 진행하는 중앙일보의 평가 기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보도된 자료¹⁾에 따르면, 교수 연구와 교육 여건에 각각 100점, 학생교육 및 성과에 70점, 그리고 평판도에 30점을 부여한다. 이처럼 2016년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과 2018년 대학 미투, 불법촬영 근절 시위 등을 지나오며 성평등한 대학을 원한다는 대학 내 페미니스트들의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대학**

1) 「[2018 대학평가]4개 이상 계열 가진 57곳 연구·교육여건 종합평가», <중앙일보>, 2018.10.29. <https://news.joins.com/article/23072970> (2019.11.26.)

평가의 세부 항목 중 성평등과 관련된 지표는 전무하다.

한국의 대학은 여전히 서열화되어 있지만, 대학 진학률은 약 70%²⁾로 증대된 지 오래다. 따라서 대학평가는 학벌주의와 성과주의, 서열을 강화하는 방식보다 다수가 특정 시기에 일상을 보내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20대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대학은 다른 어떤 사회조직보다 해당 연령대 여성의 비중이 높다. 이런 이유로 대학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구성원들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크다.³⁾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작성한 교육부 정책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2012년부터 대학 성폭력 실태조사 도구의 개발 및 보급과 대학평가 반영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지만, 교육부의 반영 시도는 없었다. 지난 9월 발표된 2020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학평가 및 운영’ 항목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편성된 금액은 0원⁴⁾이었다.

하지만 성희롱, 성폭력 없는 학습 및 노동 환경은 학습 및 노동의 기본적인 조건에 속하는 것이므로, 성희롱, 성폭력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노력이나 사후 조치를 얼마나 수행하였는지를 기관 평가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며 유의미하다.⁵⁾ 따라서 유니브페미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 공간으로 대학을 바꿔내기 위해, ‘좋은 대학’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대학 성평등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II. 연구 방법

현존하는 성평등지수로는 국가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지수, 그리고 국제성평등지수가 있다. 국제성평등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 Social Watch,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지수로, 성불평등지수(GII), 남녀개발지수(GDI), 성격차지수(GGI)를 통칭한다.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는 동일한 지표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가사노동시간, 빈곤율, 건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학 성평등지수의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표

2) “취학률 및 진학률 현황”, 통계청(2017.6) 장래추계인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국가지표체계에서 재인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2019.11.27.)

3) 이미정 외 5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2018년 교육부 정책보고서』, 교육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20쪽.

4) 「2019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8.10.,

5) 원문에는 ‘노동’ 대신 1984년 제헌 헌법 이래로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이는 사용자 중심의 용어이기에 여기서는 ‘노동’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필진 주. 앞의 글, 200쪽.

설정을 위한 자료 수집과 사례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매년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유니브페미 단독으로 자체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역량과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 소재 4년제 43개 대학의 성평등 관련 23가지 제도 현황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며, 조사 방법으로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정보공시 웹사이트 ‘대학알리미’와 각 대학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답변, 그리고 학교 당국과 총/여학생회와의 유·무선 수단을 통한 직접 연락에 한해 진행했다.

23가지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언급한 교육부 정책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1)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지위 2)예산 3)전문 상담인력 4)반성폭력 학칙 및 관련 규정 5)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여부를 검토했다. 1)의 경우 2018년 5월 교육부 권고⁶⁾를 참고해 총장직속기구인지 아닌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2)와 4)는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무로 판단했다. 3)은 2012년 교육부 정책보고서⁷⁾를 참고하여 2인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했고, 5)는 조사위원회·대책위원회·운영위원회·심의위원회 중 한 곳이라도 단서 조항 없이 학생 참여 보장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실태조사」⁸⁾를 참고하여 6)전임교수 중 여성 비율 7)교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8)직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9)재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10)여성학 전공 11)여성학 강좌 12)강의평가 시 성인지감수성 항목 13)필수 정규교과목으로서 인권/젠더 강좌 개설 여부를 조사했다. 6)~9)는 비율에 해당하므로 각각 전국 평균의 이상일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했고, 10)~13)은 유무로 파악한 뒤 세부 정보는 따로 다뤘다. 추가적으로, 주로 학생사회 대표자들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14)월경공결제와 15)관련 전산시스템 16)월경용품 자판기 17)여학생휴게실 18)화장실 불법촬영 정기점검 19)화장실 전면 비상벨 설치 20)비상벨의 송출지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그 밖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21)학적부 기타성별 22)차별금지조항 23)성중립 화장실에 대해서도 최초로 조사를 실시했다. 14)~20) 모두 유무와 설치 여부로만 판단하였으며 역시 세부 정보는 따로 분석했다.

6) 「[보도자료] 자문위원회, 대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교육부 자문위원회, 2018.5.31.

7) 이미정 외 2인,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8) 조자경,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실태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12.

III. 연구 분석

1. 종합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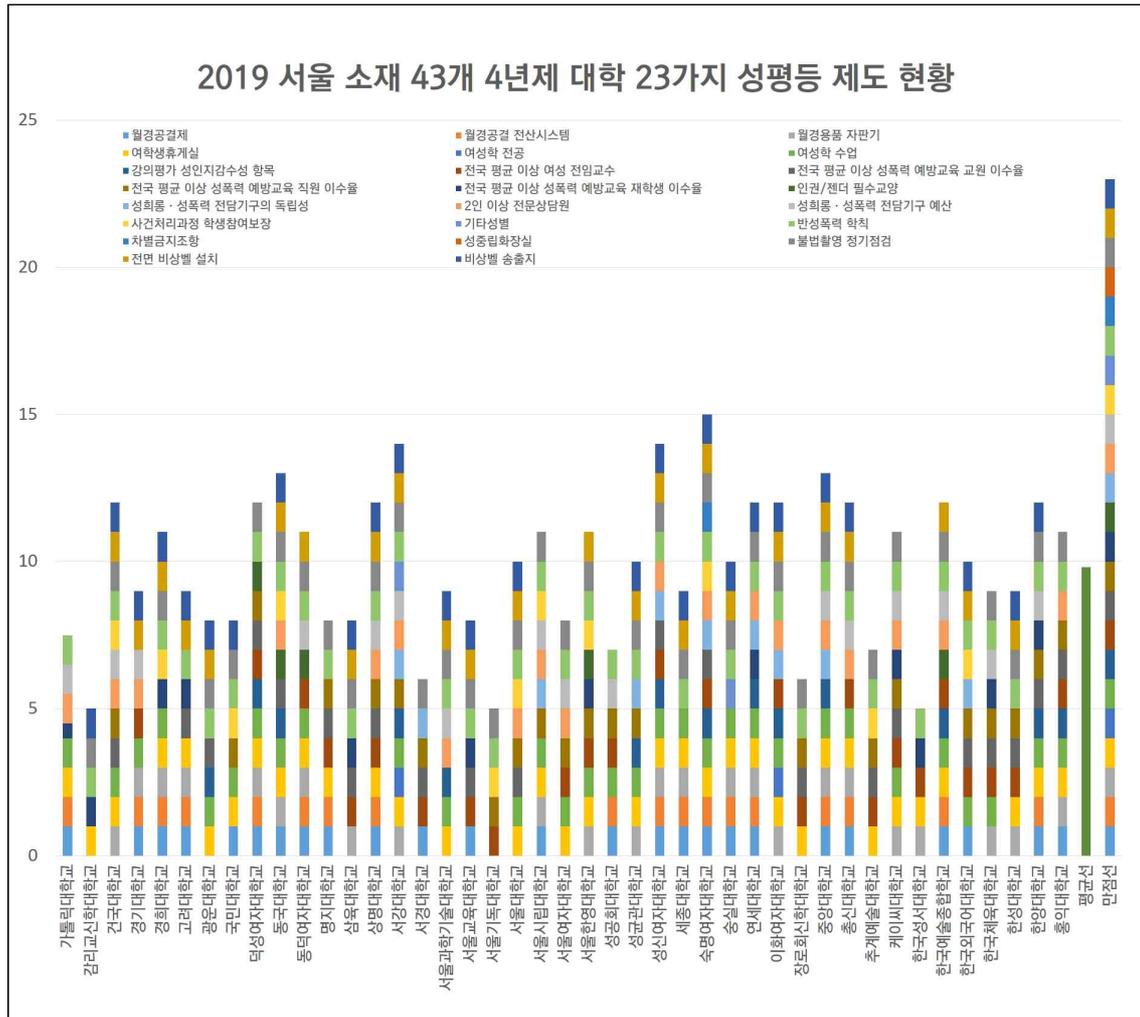


도표 1 서울 소재 43개 4년제 대학 성평등 관련 23가지 제도 현황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로서 꼽은 2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대학은 없었다. 23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43개 대학의 평균은 9.8점이다. 종합순위에서 15점을 얻은 숙명여자대학교가 1위에 올랐고, 14점으로 서강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가 공동2위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학교에 정착된 제도는 1990년대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유산이기도 한 반성폭력 학칙, 여학생휴게실 설치, 여성학 강좌 개설 순이었고, 반대로 가장 정착이 덜 된 제도는 성중립화장실, 차별금지 조항, 기타성별 순으로, 성별이분법을 넘어서는 조치들이었다. 무응답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예산이었고, 비공개인 근거는 ‘영업상 비밀’, ‘경영상 기밀’이었다. 전임교수 중 여성의 비율이 전국 평균 24.28%를 넘지 못하는 대학이 41.9%였고,

평균치를 웃도는 비율은 여자대학과 신학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응답률이 저조했던 신학대학 중 감리교신학대학교와 서울기독교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는 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2. 개별지수 분석

가.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2018년 5월 교육부 자문위원회는 일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센터)가 학교에서 위상이 낮고(학생상담센터 부설 등), 조사·상담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총장직속 독립기구 설치와 정규직 전담인력 확보,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를 권고⁹⁾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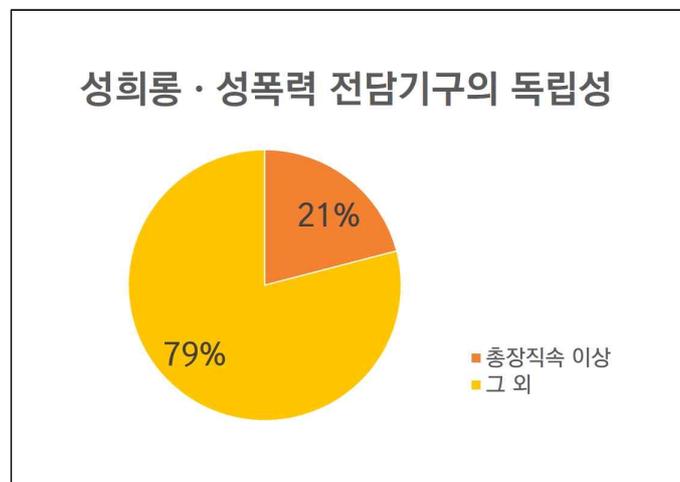


도표 2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독립성

그러나 대학별 홈페이지 상의 조직도와 관련기구 규정을 조사한 결과, **2019년 현재 서울 소재 4년제 43개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중 총장직속 이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곳은 21%에 불과했다.**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10곳만이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독립적으로 조사 및 심의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79%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 간의 사건에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생처 산하의 학생생활상담실의 형태이거나, 교무처 산하의 부속기관으로 기존의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통합된 형태¹⁰⁾가 많았**

9) 교육부 자문위원회의 글, 2쪽.

10) 대학 성평등기구로서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의 주요 형태로는 ①독립된 성희롱·성폭력상담소 ②학생상담센터에 부설된 기구이거나 학생상담센터에서 관련 업무 담당 ③학내 행정기관(교무처, 학생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앞의 글, 132쪽.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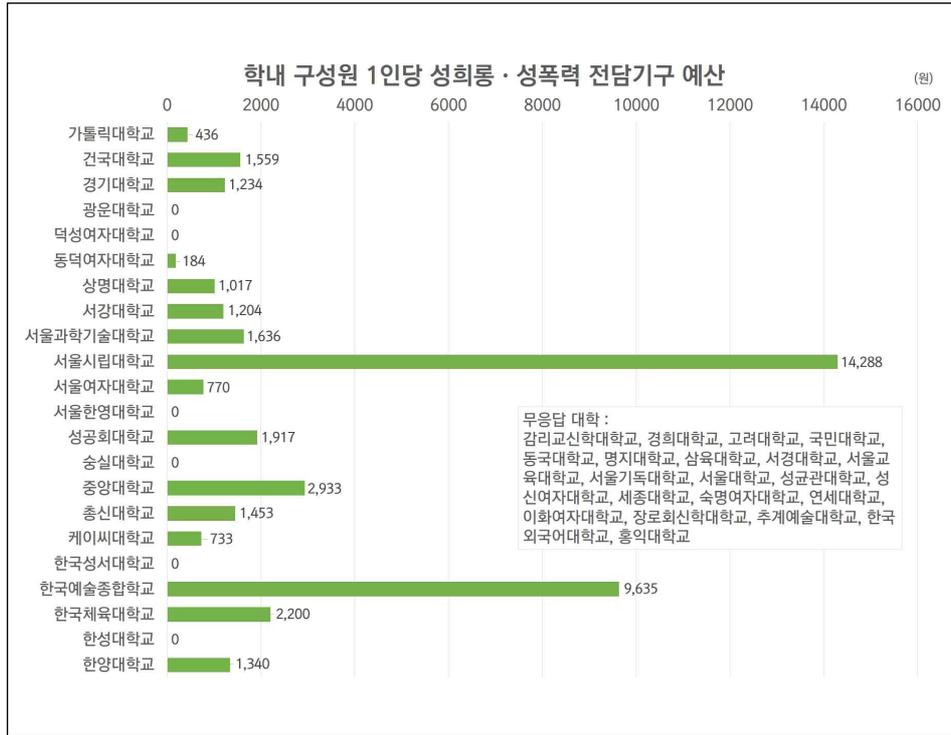


도표 3 학내 구성원 1인당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예산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는 대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사건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비용에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은 대학 별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이를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통해 문의하고 학생과 교원, 직원의 수로 나눈 값을 비교했다. 학생 수는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인 「2019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을, 교원 수는 「2019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을, 직원 수는 「2019년 직원 현황」을 참고했다. 그 결과 **학내 구성원 1인당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예산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립대학교였다. 2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3위는 중앙대학교였는데, 금액에 있어 세 학교가 큰 격차를 보인다. 인당 1,000원을 매긴 학교가 8개로 많은 편이었으나, 1,000원 이하로 책정된 곳은 4개, 0원이라고 밝힌 곳은 7개였다. 무엇보다 50%가 넘는 대학이 예산을 비공개에 부쳤다. 여기에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대학들은 ‘영업상 비밀’, ‘경영상 기밀’이라는 답변도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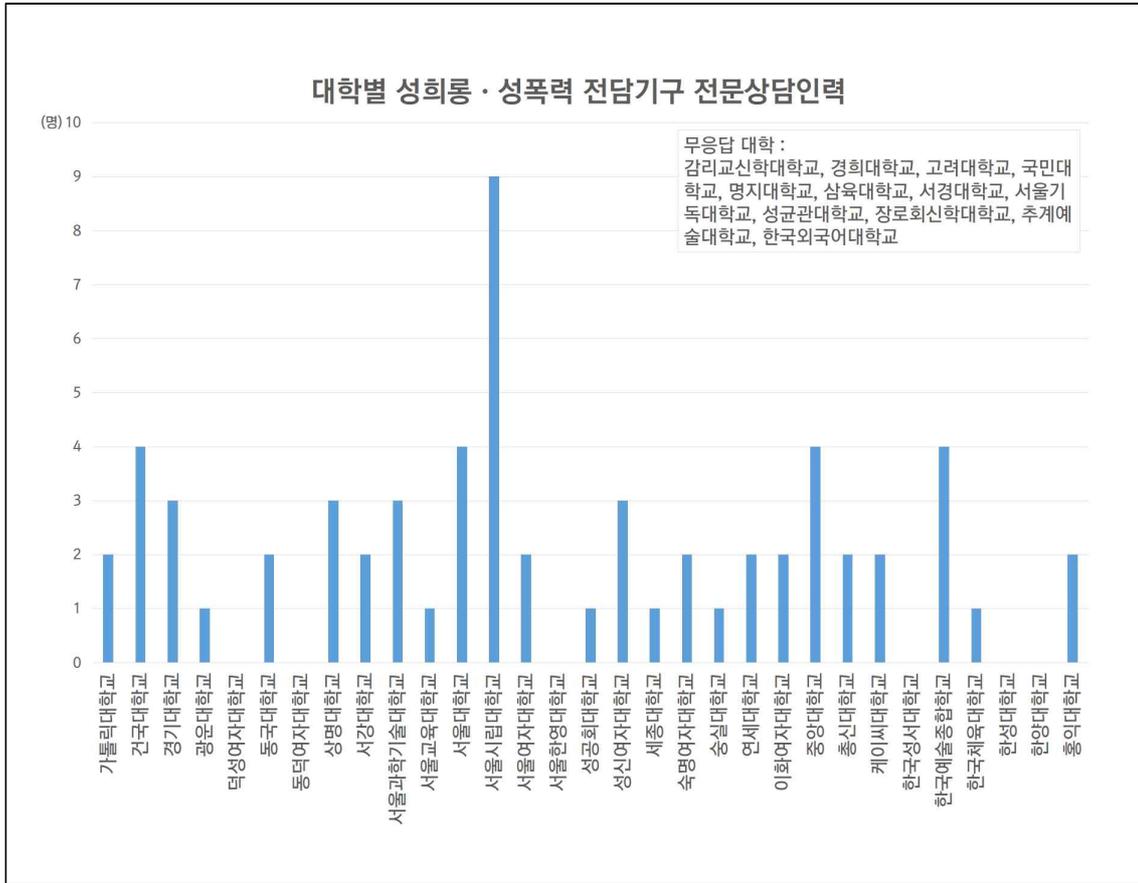


도표 4 대학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전문상담인력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전문상담인력이 가장 많은 대학은 9명이 확보된 서울시립대학교였다.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각 4명으로서 뒤를 이었다. 2012년 교육부 정책보고서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최소 인원인 2인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문 상담원이 없는 학교도 3분의 1에 달했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응답을 거부했다. 서울권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전문상담인력은 0.96명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준¹¹⁾이다. 답변한 대학 중에도 전문상담인력에 비전공자나 겸직 교수, 비정규직 교수, 연구원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곳도 있어, 이를 밝힌 경우에는 제외하고 인원을 파악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답변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2018년 교육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담당자가 학생심리, 생활, 진로와 같은 여타 분야 상담업무뿐 아니라 인사, 행정, 학생 지원과 같은 교내 관리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도 많았다.¹²⁾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주요 지표인 성희롱·성폭력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대학 기준 45.0%¹³⁾에 그친다.

11) 이미정 외 5인의 글, 80쪽.

12) 위의 글, 82쪽.

13) 위의 글, 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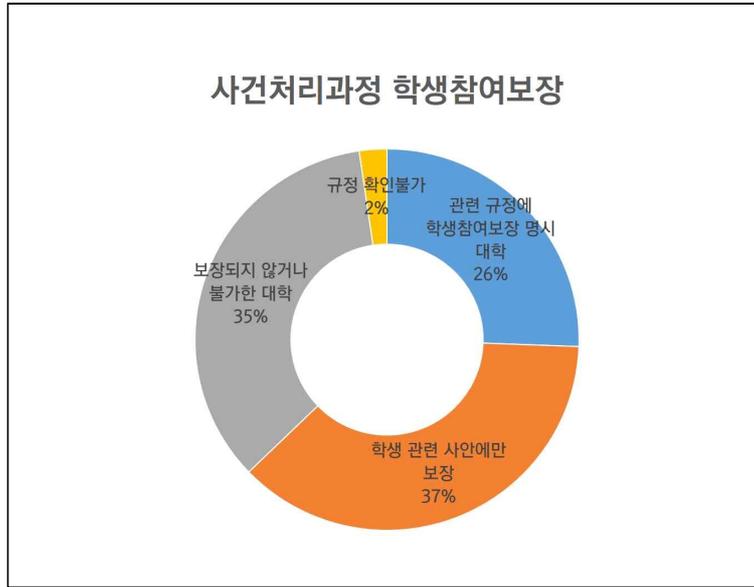


도표 5 사건처리과정 시 학생참여보장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각 대학의 반성폭력 학칙이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규정을 살펴보고, **조사위원회·대책위원회·운영위원회·심의위원회 등 규정에 명시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단서 조항 없이 학생 참여가 보장됨이 명시되어 있는가에 따라 판단했다.** 그 결과 **학생 참여 보장이 명시되어 있는 대학은 26%로, 건국대학교(운영위), 경희대학교(대책위), 동국대학교(운영위), 서울기독교대학교(심의위), 서울대학교(운영위), 서울시립대학교(인권위=운영위), 서울한영대학교(운영위=심의위), 숙명여자대학교(특위), 추계예술대학교(대책위=심의위), 한국외국어대학교(조사위=심의위)까지 총 10개뿐이었다.** 학생 관련 사안일 경우에만 학생 참여가 보장되는 경우는 보다 높은 37%였고, 학생 참여가 필수 또는 보장이 아닌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정도의 표현만 있다거나 규정에 학생 위원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35%였다. 마지막으로, 조직도 상 총장 직속기구로 존재하는 서경대학교 인권센터의 경우 규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

나. 여성학 수업과 교수

여기서는 여성학 전공과 여성 교수, 정규교과로서 여성학 강좌 및 인권/젠더 필수 강좌, 비정규교과로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교원·직원·학생 이수율, 강의평가 시 성인지감수성 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다룬다. 대학이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의 장이자 노동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비교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많은 관련 통계들이 이미 공시자료로 제공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 결과마저

평등하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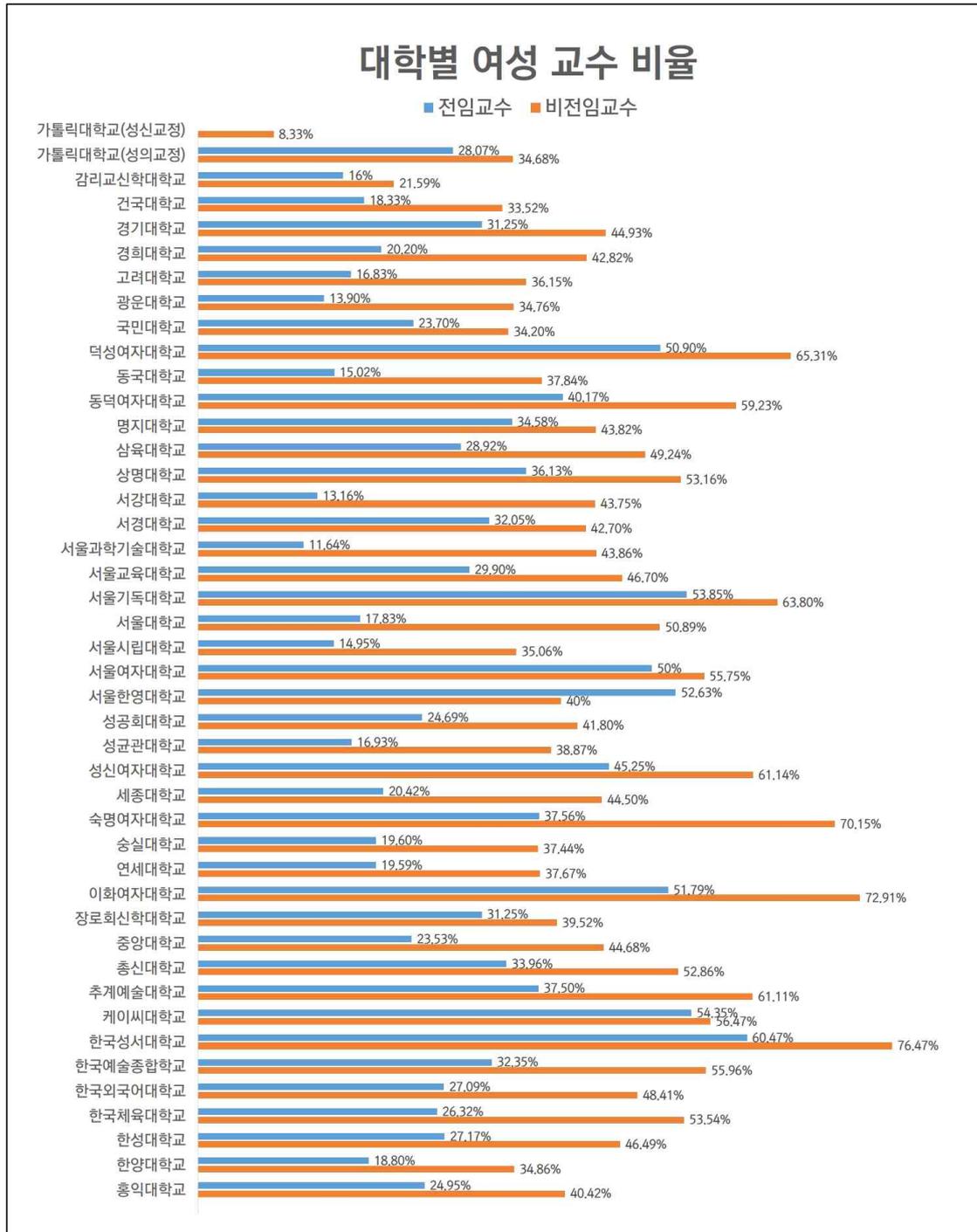


도표 6 대학별 여성 교수 비율

대학 정보공시 웹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대학의 여성 전임교수 비율의 평균은 24.28%에 그쳤다. 여성 전임교수의 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하는 대학은 43개 중 18곳이었고, 50%를 넘지 못하는 대학은 37곳으로 전

체의 86%을 차지했다. 여성 전임교수의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덕성여자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케이씨대학교까지 총 6곳으로 모두 여자대학이거나 신학대학이었다. 반면 신학과가 단일학과로 설치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의 경우엔 0%였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또한 11%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 비전임교수의 비율보다 전임교수의 비율이 높은 곳은 전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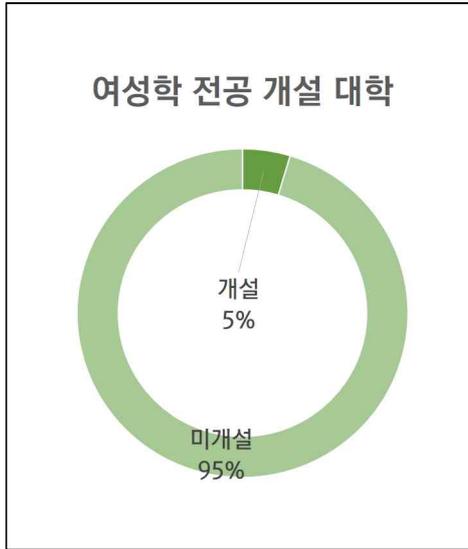


도표 7 여성학 전공 개설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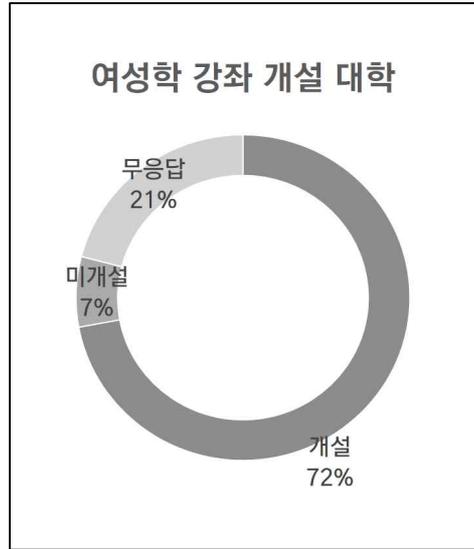


도표 8 여성학 강좌 개설 대학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은 정규과정에 개설된 여성학/젠더 관련 성평등 교과목과 비정규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⁴⁾ 대학 교육은 크게 정규 교과과정과 비정규교과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정규 교과과정은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활동으로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로 구분되며, 비정규교과과정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개설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대학 내의 의도적인 교육활동을 총칭한다.¹⁵⁾

여성학(女性學)은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이 있는 간학문적·다학문적 연구분야로서, 사회·문화적 구성물인 젠더와, 여성들의 기여, 권력과 젠더간의 연관성을 다룬다. 여성주의 이론·여성사·여성주의 정신 분석·여성 보건의 주제부터, 여성주의나 젠더학에 영향을 받은 인문학과 사회 과학의 실천 연구 등이 여성학에 포함된다.¹⁶⁾

여성학 전공은 정규 교과과정 중에서도 전공교과로서 여성학을 커리큘럼에 따라 체계적·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학 안팎에서 폄하되어온 여성주

14) 조자경의 글, 5쪽.

15) 김수경, 「우리나라 대학의 양성평등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교양교육연구』 10(3), 2016. 위의 글, 93쪽에서 재인용.

16) “여성학”,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7%AC%EC%84%B1%ED%95%99> (2019.12.01.)

의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인정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중요하다. 또한, 높아지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성학 전공의 부재로 인한 개설 강좌 부족 문제가 여러 차례 기사화되었다. 그러나 학부 과정에서 여성학 전공이 개설된 대학은 서강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로 전체의 5%, 단 2곳에 불과했다. 두 학교 모두 연계전공의 형태로 여성학 협동과정이 운영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여성학 협동과정은 2007년에, 성신여자대학교의 연계전공은 2017년에 폐지됐다. 성공회대학교에서는 학생 170명의 수요에 따른 첫 학생주도 혁신융합전공으로 2020년 2학기 여성학 전공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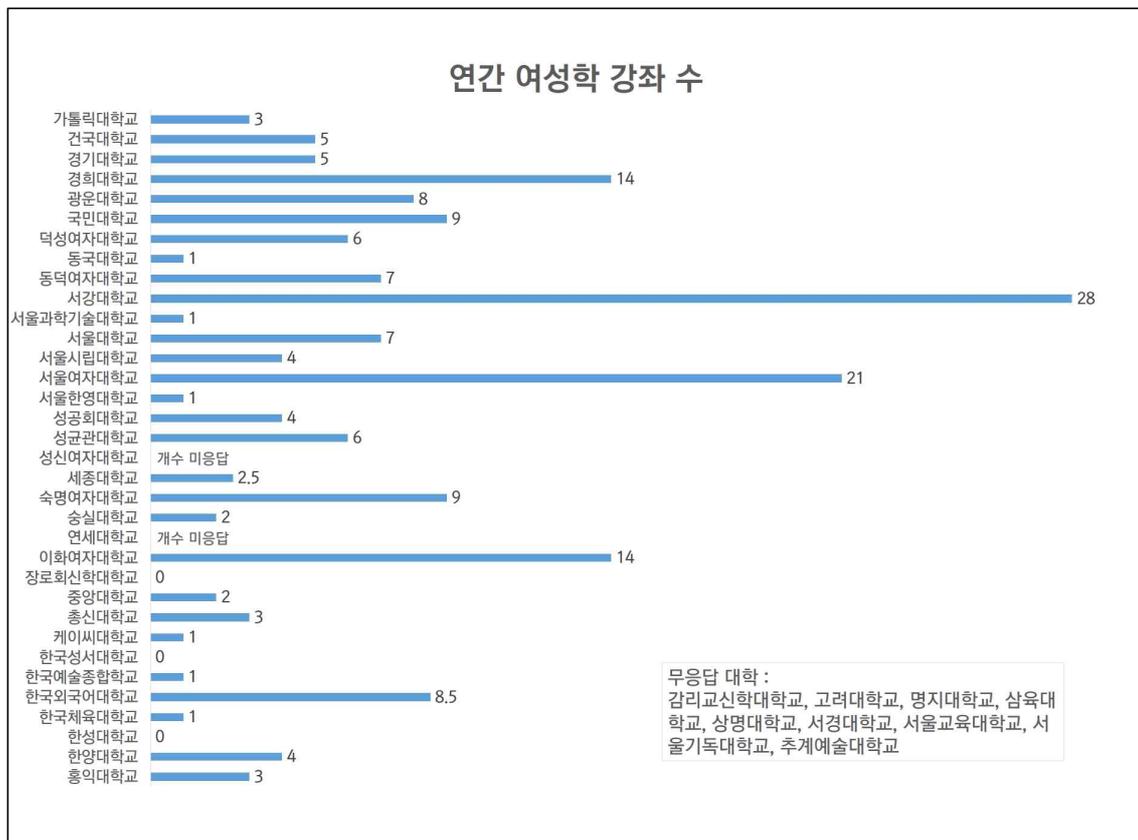


도표 9 연간 여성학 강좌 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여성학 강좌의 유무와 수를 조사함에 있어 가장 최근 (2018-2019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대학의 정보공개청구 답변과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참고했다. 단, 여성학 강좌명을 명시해준 대학의 경우 전통적 여성관을 답습하기 위한 강좌와 같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계획서를 열람했을 때 여성학 수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강좌는 배제하고 수치화했다. 또, 명확한 강좌 수가 아닌

17) 「여성학 혁신전공 신설 재점화...2020년 목표로 학생들 움직여», <성공회대 미디어센터>, 2019.09.06., <https://www.skhumedia.co.kr/?p=3695> (2019.12.01.)

범위를 제시해준 대학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평균값을 도입했다. 모든 강좌의 수업 계획서에 접근할 수 없는 점, 학교의 답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정규교과로 여성학 강좌가 개설된 대학은 72%, 개설되지 않은 대학은 7%, 무응답 대학은 21%였다. 강좌의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서강대학교로, 1년에 28개의 수업이 열렸다. 21개인 서울여자대학교와 14개인 경희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가 그 뒤를 이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와 한국성서대학교, 한성대학교는 여성학 강좌가 0개라고 답했고, 1개의 강좌만 개설된다고 답한 대학도 많았다. 성신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나 개수에 대해서는 ‘모름’이라고 하는 등 응답을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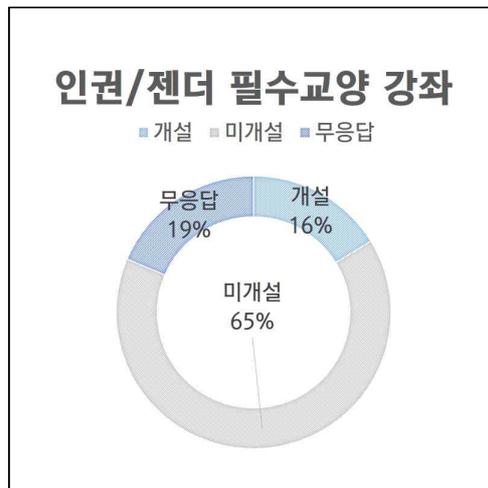


도표 10 인권/젠더 필수교양 강좌

정규 교과과정 중 교양교과로 인권/젠더 관련 강좌가 필수로 열리는 대학은 16%에 그쳤다.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총 8개교만이 인권/젠더 교양교과가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마저도 비정규교과과정인 일회성 교육과 혼동하여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응답의 비율도 19%로 개설 학교의 수치를 상회하였고, 확실하게 미개설 현황을 밝힌 곳이 65%나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18년 공통필수 과목 ‘예술가의 젠더연습’을 시작으로 2019년 젠더 교육과정¹⁸⁾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반면 연세대학교는 2020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세정신과 인권’ 강의를 필수로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9월 일부 보수세력의 집단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18) 「예술가의 젠더의식 ‘한예종-스탠다드’ 만들기」,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 2018.11.27., https://www.karts.ac.kr/mbl/bbs/bbsDetail.do?pageIndex=3&bbsId=BBSMSTR_00000000013&ntNo=51477 (2019.1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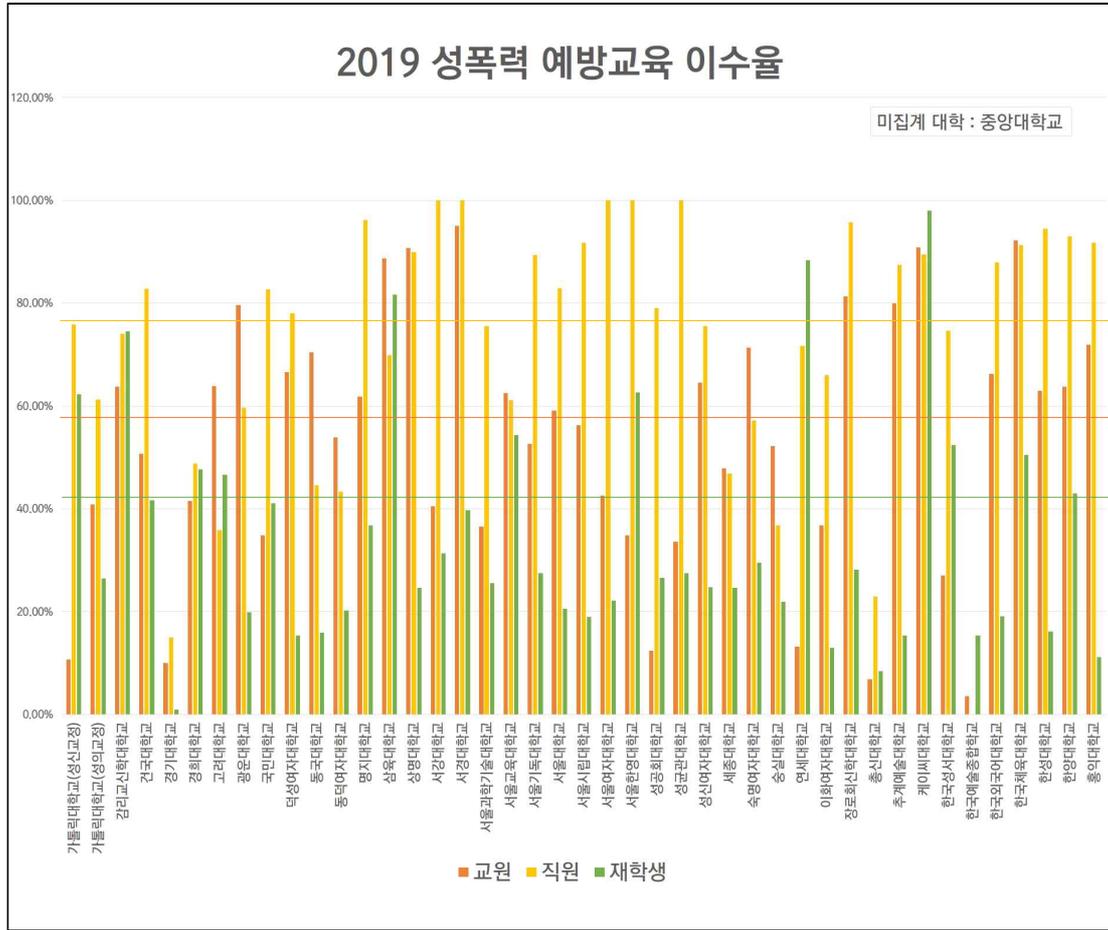


도표 11 2019년 대학별 교원·직원·재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올해 10월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따른 2019년 대학별 교원·직원·재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을 도표로 옮겼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에 한정되어 진행되었기에 해당 자료에 적시되지 않은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을 활용했으며, 미집계된 중앙대학교는 도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성폭력 예방교육 교원 이수율의 전국 평균은 57.46%, 직원 이수율의 전국 평균은 76.83%에 달한다. 반면 재학생 이수율의 전국 평균은 42.97%로 셋 중 가장 낮다. 전국 평균치보다 교원 이수율이 낮은 대학은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총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전체 43개 대학 중 절반에 가까운 21개교였다. 교원 이수율이 90% 이상인 곳은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였으며, 10% 이하인 곳은 각각 10%, 6.80%, 3.50%를 기록한 경기대학교, 총신대학교, 한

국예술종합학교였다.

전국 평균치보다 직원 이수율이 낮은 대학은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총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20개교로 교원 이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와 근접했다. 직원 이수율이 100%인 곳은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성균관대학교로 5개였으며, 최하위 3개교는 각각 0%, 15%, 22.90%를 기록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경기대학교, 총신대학교였다.

지난 10월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 대학 재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37.8%이다. 그러나 대학별 비교를 위해 위와 같이 전국 대학의 재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의 평균값인 42.97%를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전국 평균치보다 재학생 이수율이 낮은 대학은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까지 총 30개교였다. 최상위 3개교는 각각 98%, 88.40%, 74.50%를 기록한 케이씨대학교, 연세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였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성적 확인을 위해 온라인 강의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¹⁹⁾ 이수율이 높았다. 최하위 3개교는 1%를 기록한 경기대학교, 8.40%를 기록한 총신대학교, 11.10%를 기록한 홍익대학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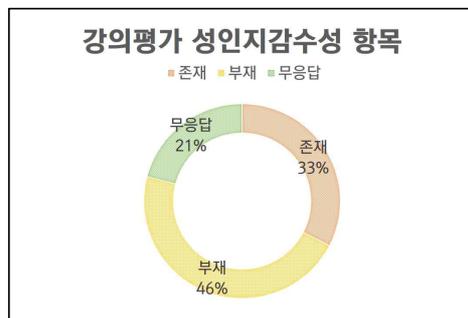


도표 12 강의평가 성인지감수성 항목

19)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시행 안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홈페이지, 2018.10.02., <https://ysugst.yonsei.ac.kr/ysugst/board02/undergraduate.do?mode=view&articleNo=48564&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 (2019.12.02.)

강의평가 항목은 교수자에 대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이의제기의 사실상 유일한 창구로 기능한다. 강단에 선 교수자는 강의평가 결과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며, 바로 다음 학기의 수업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처럼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평가 항목에 성인지 감수성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단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성차별적 언행에 대한 비판의 창구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울 소재 43개 4년제 대학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강의평가 항목 유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및 각 학교 총학생회 문의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항목이 존재한다고 밝힌 학교는 33%로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무응답이 21%, 해당 항목이 부재하다고 밝힌 대학이 46%였다.

다. 건강/안전 등 기본권

여기서는 대학이 모든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대학별 월경공결제·월경용품 자판기·여학생 휴게실의 유무를 통해 살펴본다. 또, 일상공간으로서 안전하고 평등한 대학을 위해 화장실 비상벨 설치 여부와 송출지의 유무, 불법촬영 정기점검 여부를 검토하고, 반성폭력 학칙·차별금지 규정·기타성별 선택지·성중립화장실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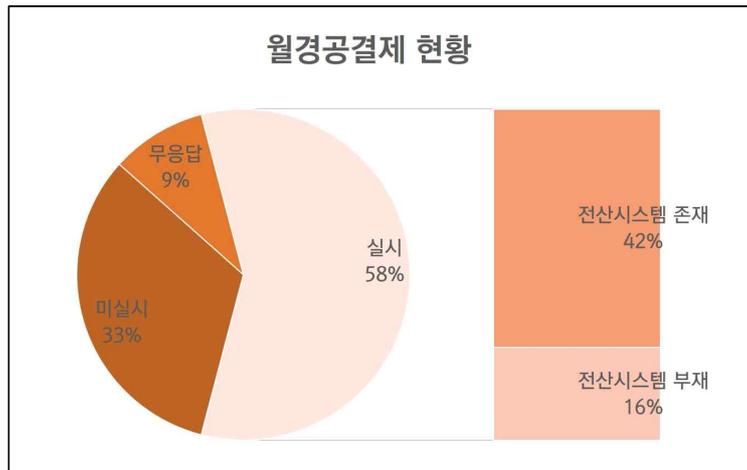


도표 13 월경공결제 현황

월경공결제²⁰⁾란, 월경(통)으로 인한 학생의 수업 결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대개 병결(病缺) 중 하나로 월경공결이 인정되는데, 이는 건강권 담론의

20) ‘생리공결제’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월경 터부의 역사 속에서 월경을 ‘생리현상’으로 불명확하게 표현한 것을 따르므로 여기서는 ‘월경공결제’로 쓴다. 필진 주.

연장선상에서 대학 여성주의자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투쟁의 역사 속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월경공결제가 시행되는 대학은 전체의 58%였고, 전산시스템까지 갖춰진 곳으로 제한하면 42%였다. 제도적으로 보장되어도 학교 포털에서 클릭하여 공결을 신청하는 전산시스템이 부재하면 각 수업 교수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한계가 큰데, 이러한 곳도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물론, 전산시스템이 존재해도 일부 교수는 월경으로 인한 공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병원 진단서와 같이 월경통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문제는 월경공결제 미실시 또는 무응답 대학이 전체의 42%나 된다는 데 있다. 미 실시 대학으로는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성대학교가 있었다. 서울 소재 4년제 여자대학 중 두 곳이 포함되었고, 여남공학 대학의 경우에는 제도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도입이 연기되거나 철회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무응답 대학으로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등 다수의 신학대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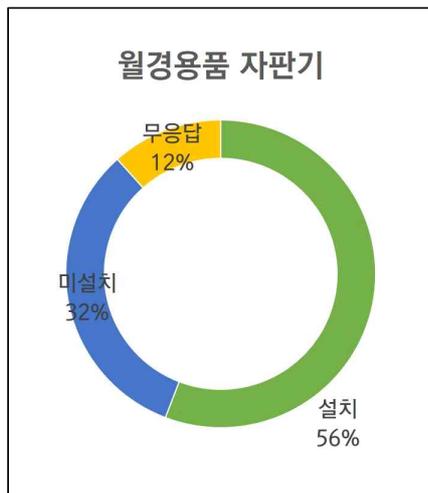


도표 14 월경용품 자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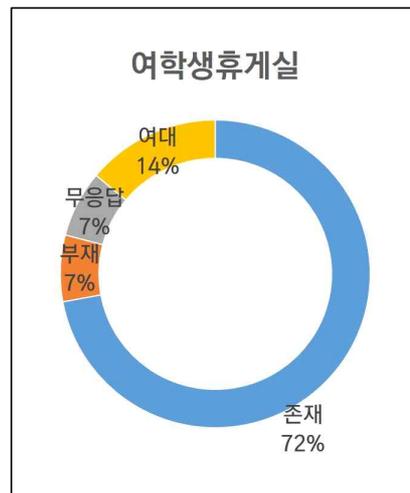


도표 15 여학생휴게실

월경용품 자판기와 여학생휴게실의 유무는 정보공개청구와 총(여)학생회 문의를 통해 조사했다. 초기에는 각 시설의 개수도 조사하고자 했으나, 학교마다 화장실의 수나 캠퍼스의 규모, 정원 등이 달라 단순 비교에 용이한 유무를 수치화했다.

먼저, 월경용품 자판기는 56%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나 32%의 대학에는 여전히 없다. 가톨릭대학교는 매출부진으로 2018년 2월에 철거했다고 답변한 반면,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가 월경용품 업체와 협약을 맺어 무상으로 월경용품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자판기는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

되지 않고, 대신 총학생회 차원에서 ‘양심생리대’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양 대학교도 자판기는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이 중단되었다.

여학생휴게실의 역사는 월경통을 겪는 학생들 혹은 여성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과방이나 도서관에서는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학생들로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과 비슷해졌다는 이유로, 여학생 휴게실이 여성우월주의와 등치되며 일부 대학에서는 여학생휴게실을 노동자휴게실이나 자습실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여학생휴게실이 1개 이상 있는 대학은 13%의 여자대학을 제외하고 72%에 달했다. 하지만 여학생휴게실이 단 1개만 있는 대학이 대부분이었다. 서경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는 여학생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고, 경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응답을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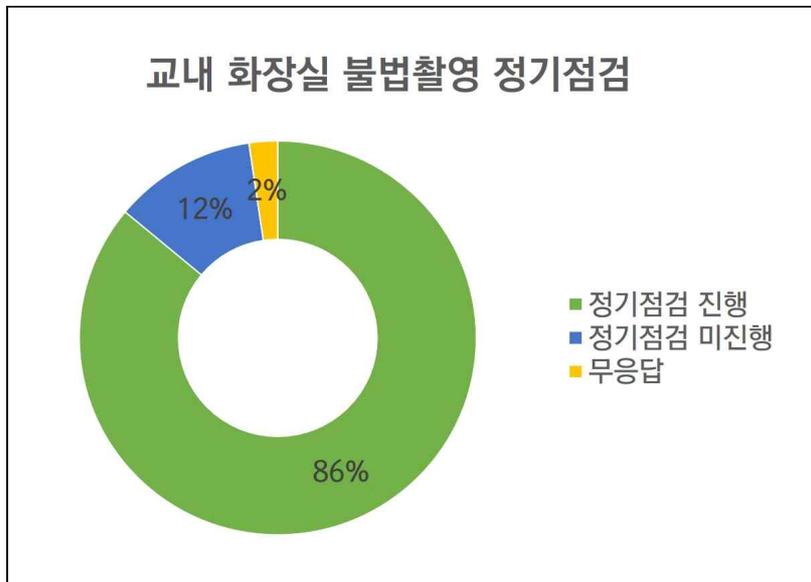


도표 16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정기점검

각 대학이 학내 구성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서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정기 점검과 비상벨 설치가 채택되었다. 약 86%의 대학에서 불법촬영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무응답 대학을 제외한 12%의 대학교에서는 정기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경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는 불법촬영 점검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고려대학교의 경우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의 주체는 학생회와 협약을 맺은 지역 경찰인 경우가 많았다.

불법촬영이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며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사안과 관련하여 안

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타 지표에 비해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 확인된 한편, 여전히 일부 대학에서 전혀 도입이 되지 않거나 의심 신고 시에만 시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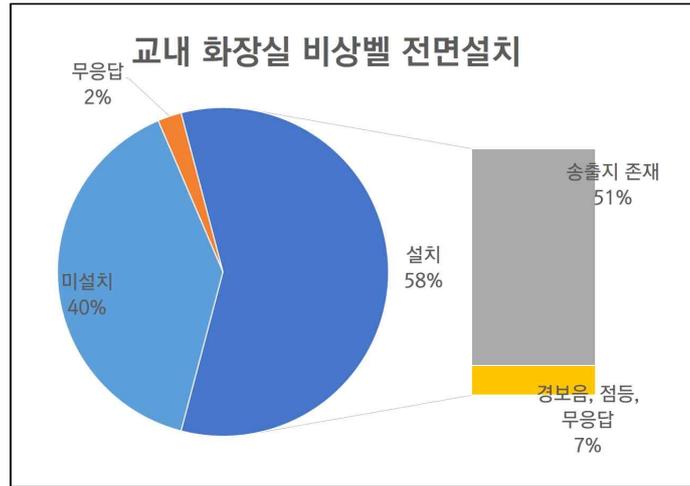


도표 17 교내 화장실 비상벨 전면설치

교내 화장실 비상벨 설치의 경우, '전면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비상벨을 눌렀을 때 송출지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화장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시 가장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써 비상벨이 필요하며, 이뿐만 아니라 도움 요청을 직접 받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벨 송출지 또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요소이다. 약 58%의 대학에서는 교내화장실에 전면적으로 비상벨이 설치된 반면, 무응답 대학을 제외한 40%의 대학에서는 비상벨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거나, 일부 건물의 화장실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비상벨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는 가톨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가 있었고, 일부 건물에만 설치된 대학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있었다.

비상벨이 전면 설치된 대학 중 비상벨의 송출지가 분명한 대학은 51%였다. 나머지 7%의 대학에서는 비상벨을 누를 시, 경보음이 울리거나 점등이 되는 등의 조치만 취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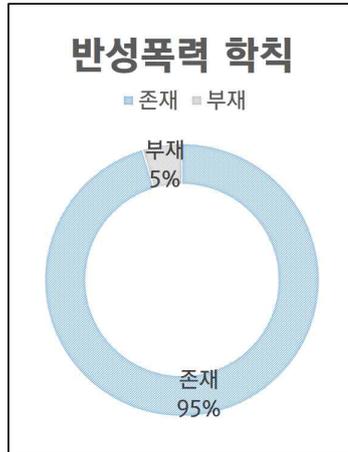


도표 18 반성폭력 학칙



도표 19 차별금지 규정

반성폭력 학칙은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것이 부재함은 학내·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본부의 대응이 전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성폭력 학칙은 대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성폭력 사건 전담기구 신설 및 개편으로 인한 이관의 경우를 포함하면 41개 대학에 존재했다. 반성폭력 학칙이 부재한 두 개의 대학은 경기대학교와 서경대학교로, 피해 학생이 최소한의 보호조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금지조항은 43개 대학 중 42개 대학에 모두 부재했으며, 오로지 숙명여자대학교의 인권센터 규정에만 존재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과 같이 학내 구성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은 종종 존재했으나, 학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에 대한 학칙 상의 규제는 대학 전반에 미흡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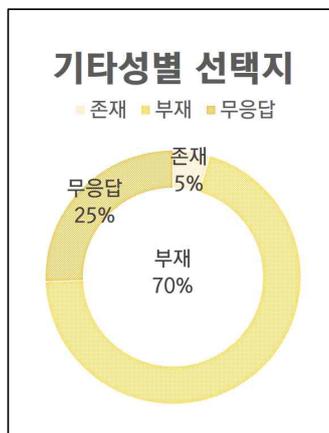


도표 20 기타성별 선택지

기타성별 선택지가 없는 대학은 43개 대학 중 70%에 이르렀으며, 25%는 응답하지 않았다. 있다고 대답한 대학은 단 5%로, 서강대학교와 송실대학교 뿐이었다. 성별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을 때 법적 성별 정정을 증명하면 가능하다는 대학의 수는 상당했으나, 현재의 법적 성별 정정 절차를 감안하면 그를 근거로 실시되는 학적부상 성별 정정은 실질적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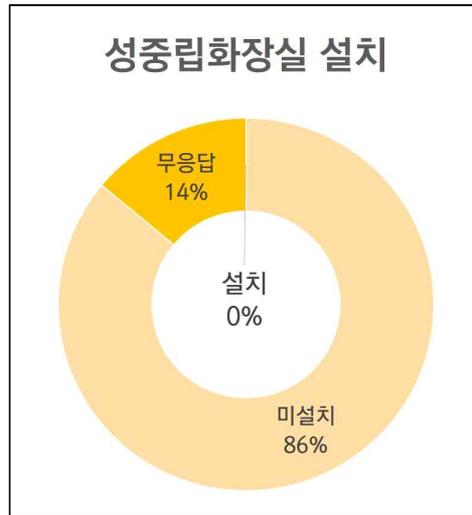


도표 21 성중립화장실 설치

성중립 화장실(All-gender Toilet)은 사회에 만연한 신체적 정상성에 치우치지 않은, 말 그대로 ‘모두에게 평등한 화장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별 이분법과 정상성에서 벗어난 신체와 정체성을 가진 학내 구성원이 이용 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없었다. 무응답한 학교는 14%, 미설치라고 답변한 학교는 86%였다.

2017년 성공회대학교에서는 한국 최초의 대학 내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추진되었지만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고, 2019년 2학기 성균관대학교에는 ‘가족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의 무성별적으로 운영되던 장애인화장실의 팻말을 바꿔 달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총학생회 문의 결과 성중립 화장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연구 결과

‘가.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연구 결과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지위 향상과 재정, 인력 확충 등을 통한 독립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생 참여 보장이 명시된 대학은 전체의 26%뿐이었고, 운영부터 심의 및 징계의 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대학에 실질적인 변화를 찾아 보기 어려웠다. 2020년 교육부 예산에는 관련 비용이 포함되었지만, 단 0.16%였다.

‘나. 여성학 수업과 교수’ 연구 결과 여성 교수 비율이 50%는 커녕 전국 평균인 24.28%를 넘지 못하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18곳이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학 강좌의 개설 개수는 해당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통해 함양하게 될 학문적 이념과 가치에 여성학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학교 당국이 여성학이라는 학문에 얼마만큼의 인적 자원과 자본을 투입하는지를 보여준다. 여성학 강좌 개설여부에 대해 답했으나 개설 개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은 성신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사례는, 각 대학의 여성학 수업 분류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점을 남겼다. 한편 각 학교 당국이 답한 여성학 강좌명 중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전통적 여성관을 가르치는 등 ‘여성’이 강좌명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학으로 분류된 강좌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각 학교의 여성학 강좌에 대한 분류 체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젠더 필수교양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16%에 불과했다.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의 8개교만이 인권/젠더 교양강좌가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수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다. 최근 혐오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인권교육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한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65%의 27개교는 인권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의 기틀을 마련키 위한 인권/젠더 필수교양에 대해 미개설이라고 응답했다. 무응답은 19%로, 필수강좌가 개설된 학교의 수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통해 대학 사회 내 성평등 교육 실태 점검 및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강의평가 성인지감수성 항목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한 21%의 대학과 해당 항목이 부재한다고 밝힌 46%의 대학은 관련 사안 발생 시 학생들의 이익제기가 어떤 방법으로 가능케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남겼다.

‘다. 건강/안전 등 기본권’ 연구 결과 월경공결제 미실시 및 무응답 대학이 42%임을 알 수 있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성대학교가 여기에 속했다.

화장실에 전면 비상벨이 설치된 경우는 학생사회의 공약 또는 학교 차원의 안전설비 확충으로 인해 58%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없거나 무응답한 곳이 42%였다. 또, 비상

벨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송출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대응 주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대학들의 비상벨은 큰 효용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내 화장실에 비상벨의 전면적인 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나아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성별 이분법을 답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임이 밝혀졌다. 여성과 남성이 아닌 기타성별을 인정하는 학교는 단 5%, 서강대학교와 송실대학교뿐이었으며,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답한 학교는 0개였기 때문이다. 특히 성별, 장애 여부 등과 상관없이 화장실은 기본권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성별 이분법을 지배 규범으로 하는 사회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논쟁적 사안의 하나로만 바라보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내 구성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어느 곳에도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반시설인 성중립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은, 성별 이분법적·이성애중심적 사회에서만 상상되어온 정형화되고 규범적인, 그렇기에 누군가가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제반 시설에 대한 인식이 재고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상공간으로서 안전하고 평등한 대학을 만드는 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 ‘대학평가 및 운영’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은 0원이다. 재학생이 중심 활동가인 비영리단체에서 지금껏 대학평가에 반영된 적 없지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대학별 성평등 현황을 최초로 조사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향후 각 시·도와 협력하여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대학의 성평등 현황을 더욱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 현황이 대학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평등한 대학에 대한 요구를 모아내고 질적 연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